

『인권연구』 9(1): 185-189.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9(1): 185-189.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6.9.1.185>

[서평]

자유, 평등, 연대를 다시 잇는 ‘운영체제’를 찾아:

『자유와 평등(*Free and Equal*)』

(대니얼 찬들러, 홍기빈 옮김, 교양인, 2026) 서평

홍 기 빈*

현재의 산업 문명은 시장 경제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각각 경제와 정치의 축을 이루는 골간의 제도로 삼고 이를 통해 프랑스 혁명 이후 사회의 근본 가치가 된 자유, 평등, 연대 및 통합을 달성한다는 틀을 지니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공산권의 몰락과 지구화의 부상이 나타난 이후 이는 전 세계적인 보편적 틀로서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다. 하지만 2008년의 지구적 금융 위기가 터진 후 2010년대가 들어오면 이러한 ‘운영 체제’는 곳곳에서 기능부전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아예 시스템 전체의 작동 중지까지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공포를 낳아 왔다. 2020년 벽두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바로 그러한 공포가 확산되는 계기였다. 2026년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AI와 로봇의 부상으로 산업 문명 전체가 상전벽해의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운영 체제’가 계속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는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유명한 안토니오 그람시의 문장처럼 새로운 운영 체제의 윤곽이 드러난 것은 아직 아니다.

이 책은 몇 가지의 기존 사회 체제의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몇 가지 개혁 의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운영 체제’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자체의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는 야심찬 저작이다. 그리고 이를 사회 이론이나 정치철학과 같은 추상적 차원에서 시작하여 구체적인 현실적 문제들을 상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및 제도 개혁의 차원까지 그려내고 있다. 이는 정치 철학과 경제학을 통합하여 ‘경세제민’의 포괄적 프로그램으로 엮어내었던 아담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파비안 사회주의자들과 같은 영국의 정치경제학 전통을 강하게 암시한다. 저자인 다니엘 채들러는 그 학문적 훈련과 이력을 볼 때 그러한 과제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캠브리지 대학교와 런던경제대학(LSE)에서 경제학, 철학, 역사학 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인 아마르티아 센의 지도로 논문을 작성했으며, 영국 총리실과 부총리실의 정책 보좌관을 거쳐 각종 싱크탱크에서 사회경제 정책을 만드는 일을 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저자의 이력이 단순한 무목적의 편력이 아니라 일관된 문제의식이 관통하고 있는 것임은 이 책의 구성과 서술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가장 높은 수준의 추상적 정치철학에서 가장 구체적인 차원의 제도 설계까지가 고른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미일관한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영 체제’의 철학적 기초로서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존 롤즈의 정치철학이다. 저자는 롤즈가 말하는 정의의 두 원칙이 각각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두 번째 원칙의 두 번째 부분, 즉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과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원리에서 연대라는 가치를 도출하여 이것이야말로 일견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치를 하나로 통일하는 열쇠가 되는 것으로 롤즈의 철학을 이해하고 있다. 이 책의 앞 부분은 존 롤즈의 이론을 요약 정리하고 그를 둘러싼 논쟁을 소개하면서 롤즈의 입장을 옹호하는 데에 쓰이고 있는데, 결코 간단하지 않은 롤즈의 논리를 짧은 분량 안에서 지극히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만 떼어 놓아 따로 활용해도 좋을 정도라는 말을 듣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롤즈의 정치철학은 모든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와 맥락을 사상한 상태에서 ‘무지의 베일’이라는 일종의 추상적 사고 실험에서 출발하여 이론을 구축한다. 혹자는 ‘운영 체제’의 구축의 기초를 왜 하필 이러한 추상적 철학 이론에서 찾고 있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으며, 또 롤즈에 동의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이들은 반감을 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롤즈의 자유주의 사상과 거리감을 느끼는 내가 볼 때에도 이러한 저자의 선택은 분명한 설득력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위기와 혼란은 단순히 이런저런 물적인 이해와 권력 관계의 충돌에서 빚어진 것만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서로 전혀 다른 관점과 생각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며, 전자와 후자가 서로 겹치고 착종되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모든 정치철학과 사회 이론은 그러한 복잡한 싸움판의 산물일 수밖에 없고, 그 중 어떤 것을 골라서 ‘운영 체제’ 구축의 기초로 삼는다고 해도 초입부터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피할 길이 없다. 존 롤즈의 철학 또한 좌파와 우파로부터 여러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지극히 추상적인 사고 실험이라는 성격 덕분에 대단히 탄력적인 해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입장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탁월한 포용성 덕분에 지금과 같은 혼란 상태에서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미덕을 가지고 있다. 극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을 제외한다면 좌파 우파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자유, 평등, 연대의 세 가치에 근간하여 여러 충돌되는 입장을 포용하고자 하는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강점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처한 여러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도 그 세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해법을 롤즈의 철학으로부터 도출해 나간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현실적인 정책 및 제도 설계의 제안들은 흔히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나올 것이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저자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반대한다. 스스로 동성

애자임을 밝히고 있는 저자는 당연히 성소수자들을 포함한 다종다기한 차별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입장을 법적 강제라고 하는 획일적인 국가 권력의 형태로 제도화할 경우 그것이 수반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댓가가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도 흥미롭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그저 ‘기회 균등’으로만 협소하게 해석할 때 나타나는 능력주의(meritocracy)를 저자는 새로운 종류의 불평등으로 비판한다. 공산주의와 같은 결과의 평등도 아니며 신자유주의 시대에 팽배한 능력주의의 ‘기회 균등’도 아니라면 평등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때에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롤즈의 차이 원칙(difference principle)에 입각해 본다면,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과 이에 따르는 상대적 부유층의 조세 부담 증가는 자연스러운 해법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 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후반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구체적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 해법을 논하면서도 그것을 일관하는 보편적 철학적 원리를 계속 재확인하는 논의를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동의하기 힘든 주장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라 이 책을 꼭 읽도록 권하고 싶다.

어떤 이는 이러한 의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일관된 ‘운영 체제’가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저자는 이렇게 답할 것 같다. 더 많은 이들이 생각과 힘을 모아 현실을 바꾸어 낼 수 있는 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아무리 좋은 구상이 있어도 또 아무리 다수가 합의하는 사회적 공론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을 추동하여 현실을 바꾸는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대로이며, 이러한 현상유지는 더 좋은 사회에 대한 상상과 토론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낳게 마련이다. 어느 개별의 쟁점에서는 뜻과 생각이 비슷하다가도 다른 쟁점으로 가면 격렬하게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상태로 사람들이 사분오열되어 있다면 이러한 대중 정치의 힘

은 나타날 수가 없다. 따라서 여러 논란 많은 쟁점들을 차후의 토론 과제로 남겨 둔다고 해도 큰 틀에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의 조직 및 운영 원리, 그야말로 ‘운영 체제’의 구상이 없다면 많은 이들이 그렇게 크게 모여서 큰 힘을 만들어내는 일 자체가 막히게 된다. 저자는 스스로가 넓은 의미에서의 진보 정치의 부활을 꿈꾸고 있으며 이 책이 그러한 꿈을 현실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여러 갈등을 넘어서 힘 있는 다수가 된다는 것이 진보 정치의 전제라면, 그 매개가 되어 줄 ‘운영 체제’의 구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저자의 생각은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